

이원화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 첫걸음

새만금, K-무탄소 커플링 시티로

국토부, KTX-SRT 시범 교차 운행 오늘부터 본격 시행 매일 각 1회 왕복... 안전·고객편의 문제 없도록 만전

전북 출신인 김은덕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특히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편의 또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를 직접 탑승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 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코레일, 에스알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이달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영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배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

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적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며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홍승표 사장 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사의 교차운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 전반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알 정영우 대표이사는 "통합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 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국가전략 핵심 무대 전향해야"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새만금을 국가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전향하기 위해 K-무탄소 커플링 시티 구상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새만금 1석 3조 국가전략! K-무탄소 커플링 시티로 구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대전환>은 탄소중립을 개발 기술이나 선연의 차원이 아닌 산업·물류·에너지·도시가 통합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 전환'의 과제로 진단하고, 이를 실증할 최적의 공간으로 새만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MO 2050, CBAM, RE100 등 글로벌 탄소 규범은 공급망과 도시 단위의 저탄소 운영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 제조업과 해운·물류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이를 통합적으로 검증할 실험 무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새만금항 신항 개항과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이 맞물리는 현재는 전환의 조건이 성숙하는 결정적 시기로 분석됐다. 'K-무탄소 커플링 시티'는 무탄소

에너지를 축으로 에너지·물류·산업·도시 기능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통합하는 시스템 도시 모델이다. 그린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의 생산·저장·전환을 통해 항만 운영, 물류·물류, 산업 공정, 도시 운영 전반을 연계 설계함으로써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전북연구원은 이를 통해 2050년을 목표로 한 장기 조성 중심의 개발 구도를 넘어 현 정부 임기 내(2029년) 가시적 국가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실험 구조를 입증해 타 항만·산단·도시로 확산 가능한 국가 전환 모델을 제시하며, △글로벌 규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전북지도를 국가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격상시키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탄소중립은 환경 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 재편 과제"라며 "새만금은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6월 7.18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정책으로 경쟁, 결과로 책임질 것" | 윤정훈 도의원, 무주군수 '출사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이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주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부정적 프레임에 기대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폐어플레이 선거'를 지르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출마 배경에 대해 "무주는 덕유산과 적상산, 청정 하천과 반딧불이, 태권도의 성지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전북의 보물창고"라면서도 "지역 활력 저하와 상권 침체, 관광 감소, 청년 정착 여건 부족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30여 년간 국회 정세균 의원 보좌관과 군의원, 도의원을 거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무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며 "지역 발전의 힘은 결국 사람"이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마을이 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이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켜지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무주 발전을 위한 8대 공약도 제시했다. 공약에는 △예산 6천억 시대 개막과 성과 중심 군정 △무주형 햇빛 소득 마을 조성 △햇빛 연금 지급 △농업 유통·선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4계절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전통시장·읍내 상권 활성화 △태권도원 기업 유치,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우고 동계스포츠·생활 체육 연계 일자리 산업 육성 △청년 주거·일자리·정착을 연계한 청년 패키지 확대 △교육 격차 없는 지역 조성을 통한 무주 출신 청소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찾아가는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만호 기자

특히 태권도원과 무주 리조트를 활용하여 생활 체육 동계스포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무주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을 통해 윤 의원은 도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하여는 "무주군을 대변하는 유일한 도의원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 20여 명이 참석해 출마를 응원했으며, 학교 은사인 퇴직 교사가 윤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조용히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말로 기대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무주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언론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지방소멸 위기 직면한 임실의 현실 진단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26일 임실 장날 맞춰 출판기념회

김진명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김출마예정자의 정치 여정과 지역 비전을 담은 저서 <더 임실, 더불어 김진명>을 공식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출판기념회에는 지역 주민과 정치권 인사, 지지자 등이 참석해 저자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고 임실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임실 장날에 맞춰 평일에 개최함으로써 농민과 소상공인 등 군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서 <더 임실, 더불어 김진명>은 김출마예정자가 걸어온 삶과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임실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책은 △임실형 기본소득인 농촌 주민수당 도입 △피지컬 시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햇빛배당을 활용한 지속가능 소득 모델 구축 등 실행 중심의 지역발전 구상이 담겼다. 김출마예정자는 인사말을 통해 '이



책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임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기록"이라며 "임실의 문제는 임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준비의 과정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1963년 임실군 신령면에서 태어난 김출마 예정자는 전주대학교 법학과와 전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7·8대 의원을 지냈다. 또한 임실에출연연인협회 초대회장과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및 겸임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상임대표, 피지컬시 임실위원회의 및 햇빛배당 임실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김출마예정자의 정책 비전과 정치적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임실군수 선거 후보에도 꼭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업·경제 전문가로 순창 대전환 기여" | 임종철 전 농협 손보 부사장, 순창군수 도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임종철 전 NH농협 손해보험 부사장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며 순창군수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임 출마자는 이날 "소멸 위기에 놓인 순창을 살리고 군민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정치기술자가 아닌 30년 농업과 경제 현장을 걸어온 임꾼으로서 순창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군정에 대해 "군민에게 희망보다 박탈감이 컸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했다. 아동 행복수당, 농민수당, 청년 종자장 등 이른바 3대 지원사업 약 132억 원 규모의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 축소 논란이 군민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출마자는 자신의 강점으로 농협과 금융권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경영 능력을 제시했다.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거쳐 NH농협 손해보험 마케팅부서 부사장 SM 신용정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농업과 금융을 동시에 경험한 점이 순창 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임종철 전 NH농협 손해보험 부사장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며 순창군수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를 바꿀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순창에 필요한 인물은 구호가 아닌 소득을 만드는 전문가"라며 재정 확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약속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우선 군민의 복지 정상화를 제시했다. 삭감된 아동 행복 수당을 복원하고 농민수당은 연 240만 원 수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 평균소득 20% 상승과 농가소득 6천만 원 달성을 제시하며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와 수도권 농협 하나마트

공급 계약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 정책으로는 임대형 AI 스마트 팜 단지 유치와 반값 공공임대주택 공급,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 귀농·귀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주거·소득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강천산 중심의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강천산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장류 체험공간, 야시장 등을 조성해 연 500만명 방문 관광지, 100억원 규모의 관광경제 효과를 거두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공약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치와 24시간 야간진료 체계 구축, 치매 호스피스 병동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한국마사회 호남권 레저파크 조성 등 관광·농업·발달산업을 결합한 지역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대 효과를 거둬 이를 복지 재원으로 환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 분노 지원센터 조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개입찰 강화 등 순창형 ESG 경영도 선언했다. 임 출마자는 "순창은 지금 보여주는 행정을 지속할 것인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청년과 농민이 살아나는 행정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순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교육위, 장애학생 인권 보장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 보장 및 학교·학부모 소통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지원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답답·전담 회피, 병가를 통한 책임 전가, 사실상 전학 강요 등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속에 마련됐다. 특히 '교권'을 명분으로 한 소통 단절이 갈등을 개인 차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배정됐다. 또한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학생이 장애학생으로 공식 인정될 예정이어서, 수업 중 저혈당 대응 등 현장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위원회는 조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주도했다. 간담회는 전북 장애학생 조례 개정 및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 모임에는 전북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 전북특별자치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장애인권연대, 발령자사모, 한국코넬리아드랑게 중후군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관공 의원, 교육·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교육청 및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1형 당뇨 학생 등 건강지원 필요 학생의 수업 중 섭취·혈당 측정·응급대응 기준 마련 △교직원 건강지원 교육 의무화 및 대응 매뉴얼 제정 △7월 시행 예정인 현장 준비 일정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답답·전담 회피, 전학 강요, 편의지원 미이행 등 현장 차별 사례를 유형화하고 조례 미이행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다. 학교·학부모 간 소통 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입, 정기 상담제 제도화, 공식 조정 절차 및 중립적 조정기구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자(교장·교감) 책임 명시와 지도·감사 기준 정비 등 조례 이행력 강화 방안과 기존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조례 제정 방향도 폭넓게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